

민주 장수·순창군수 경선 패배 후보자들, 중앙당에 재심 신청

“어르신들 휴대전화 이용 당 경선 조작 증거 포착”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권대영 순창군수 예비후보 “경찰 수사 의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와 순창군수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양성빈·권대영 두 예비후보들이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 선거를 근거로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전북 장수에 이어 순창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을 앞두고 노인들을 상대로 한 ‘휴대폰 모으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먼저, 양성빈 민주당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수군 곳곳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이 포착됐다”며 “불법선거로 얼룩진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재심신청은 민의를 배반하려 함이 아니다. 경선 직후 지역 곳곳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이 포착돼 공권선거와 대리선거가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현실과 고령층에 대한 우롱과 속임수가 도를 넘는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인제보자 A씨가 경선 당일인 29일 상대 후보 지지자인 B씨가 반얀면의 한 마을에서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씩을 줬다는 제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들이 노인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모으고 그 대가로 5만원을 교부했다는 것이다.

당당 노인의 휴대전화로는 실제로 당일 11시 34분에 권대영원 투표를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성빈 예비후보는 밝혔다.

양성빈 예비후보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장수군 선관위에 고발조치했으며, 공인제보자 A씨도 선관위에서 진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 대에 2건의 제보가 더 있었다는 것이 양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양 예비후보는 “금권선거의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지역에서 광범위



지난달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권대영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뒤, 경선 과정 불법선거의혹에 대한 근거라며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하게 진행돼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기자회견 직후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양성빈 예비후보는 “경선의 정당성을 통해 제대로 된 당원들의 의견과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후보가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대영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예비후보도 경선이 불법과 부정 선거로 진행됐으며,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과 최기환 후보의 후보박탈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예비후보는 같은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후보자격을 얻은 최기환씨의 불법경선조작으로 인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들과 군민들이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졌다”면서 “최기환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최기환씨 선거운동원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심번호 ARS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한 곳에서 투표를 대신하고, 마을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 최기환씨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같은 사례들이 제보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사법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기환씨에 대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휴대전화 이용 불법 경선 조작’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휴대전화를 악용한 경선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구대정치의 전형적 행태인 만큼 최기환 후보 자격자는 즉각 사퇴하고, 순창군수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대영 예비후보는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 순창군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기자회견 직후 전북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한완수 입실군수 예비후보

민주 중앙당에 재심 신청

한완수 입실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난달 29일 “상대후보가 노인들 휴대전화로 대리투표한 정황이 다수 포착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상대후보의 측근들이 ▲경선 여론조사 기간에 입실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대리투표를 진행했고, ▲심지어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걸어가서 특정 장소에서 대신 투표를 시행한 정황이 있다는 녹취록을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는 한병락 예비후보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3월부터 입실군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권대영원에 입당하는 조건으로 5만원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이러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실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경선 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 사실도 재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고발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폐쇄된 전주 자립원 부지에 건립 확정”

민주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북관 ‘도가니’ 사건으로 폐쇄된 전주 자립원 부지가 장애인 복지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폐쇄 조치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던 전주 자립원 부지에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건립이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국비 201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자립과 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교육연수 인원 1만3,810여명, 숙소정원 188명을 수용하는 교육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 정책의 동향 및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 교육·전시·여가·문화교류 등을 통합한 장애인고용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 규모와 국비 부담 비율 등에서 중앙정부와의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어왔고, 정치권 및 지자체 한 국장애인고용공단을 비롯한 민·관 유관기관의 협력 끝에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의 역할이 중추적이었던다는 평가다.

안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 교육원 설립과 전복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고용안정을 위한 거점인 전북에 생기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자립원 폐쇄 이후 갈 곳조차 없이 어려운 생활을 했던 도내 장애인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장애인, 장애인 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로 나선 안호영 의원은 장애인 분야 7개 공약으로 ▲도지사 직속 상설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인권 강화, ▲여성장애인 인권권 강화, ▲장애인 종합지원조직 제정 추진, ▲중증 장애인 상해보험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두세훈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완주군수경선 재심을 인용하고, 완주군을 전략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완주군수 경선 재심 인용해야”

두세훈 예비후보 “5만원권 등 쌓아두고 카드놀이, 불법도박 의혹 제기는 정당 지선 승리 위해 완주군을 전략지구로 지정, 하자 없는 후보로 전략공천을 주장

두세훈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완주군수경선 재심을 인용하고, 완주군을 전략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예비후보는 “국영석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4월 2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자신을 둘러싼 도박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나 허명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 불법도박 의혹만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장례식장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몇 차례 카드놀이 했다는 국영석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두세훈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THE FACT 및 지역방송의 국영석 후보에 대한 지난 2017년 9월 14일 도박의혹 사안이 포함된 보도를 확인해보면,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쌓아두고 카드놀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상식적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도박 의혹 제기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세훈 예비후보는 “완주군수는 완주의 얼굴이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재심위는 음침침의 심정으로 재심 인용을 결단해 완주군을 살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예비후보에 따르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예비후보가 특정 예비후보에 대해 정체가 의심되는 후보 또는 철세정치인이라면서 비난하고 있고, 또 다른 예비후보 역시 특정 예비후보를 향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차례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경선결과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두 예비후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심이 수용된 후 재경선을 한다하더라도

민일 여타 예비후보들로부터 흠이 있다고 공격받는 특정예비후보가 재경선에서 1등을 할 경우 완주군의 혼돈은 반복될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세훈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완주군수 후보를 공천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찾아 이번 6·1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혼돈의 완주군을 전략지구로 지정해 깨끗하고 도덕적 하자 없는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혼돈의 완주군을 전략지구로 지정한 후, 시민배심원단을 통한 방법, 청년전략지구로 정하는 방법, 하자 없는 후보를 단수공천하는 방법 등 중앙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현안 적극적인 사업 추진 요청할 것”

민주 김윤덕 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최근 전북도지사 경선을 마무리 짓고 국회로 복귀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당)이 5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청문회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앞둔 지난달 29일 “윤석열 당선인이 전북을 찾아 미래 전북의 일거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첨단 산업과 금융산업이 들어오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 공약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할 원희룡 국무위원 후보자의 소신과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혼란스러운 정권교체기 중단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을 필두로 한 새

만금의 주요 국책사업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호남선 지방침하에 따른 하자보수의 조속 종결 등 전북과 지역구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소멸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시리즈’ ▲안전을 위한 SOC사업 확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조정, ▲지역안정 확대 채용 등을 다룬 입법사항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할 계획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것이 된 민주당, 철저하게 코너에 몰린 전북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의 뚝을 찾고 전북의 목소리를 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계획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운전면허시험에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추가

민주 신영대 의원, ‘도로판 모세의 기적 훈련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운전면허시험에 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길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 수료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대한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재난, 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급차가 현장과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로 골든타임 기준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자 긴급자동차 양보, 피양 요령 등을 보다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긴급자동차 길터주기에 대한 법적근거 공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급차량의 원활한 구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제5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지역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5기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기술자문위원들은 총 244명으로, 건축·토목·도시·정보통신·에너지 등 27개 분야에서 학계와 공공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이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입찰방법, 신기술 선정·활용, 설계변경, 정밀안전 진단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맡게 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지역에 용지조성,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글로벌 신산업 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